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고) 기준(안) 설명회 안내

□ 회의 개요

- (주최/日/場/參)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5개 권역, 각 1회씩

구분	강원권	부산권	경남·전남권	충남·전북권	인천권
일시	'23.9.7(목) 14시~16시	'23.9.5(화) 14시~16시	'23.9.12(화) 14시~16시	'23.9.11(월) 14시~16시	'23.9.13(수) 14시~16시
장소	동해시 (동해지방해수청)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군산시 (군산지방해수청)	인천시 (인천지방해수청)
항만	속초~동해~호산	포항~부산~마산	옥포~광양~완도	목포~군산~대산	평택·당진~인천
참석	해당 항만 항만운송(관련)사업체 및 관련 업·단체, 소관 관리청 담당자 등				

□ 회의 내용

- ①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 개정(안)(붙임 1) 설명 등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 개선권고('23.5)에 따라 우리부에서 도출한 등록(신고)기준 재정립(안)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 ②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신설(안)(붙임 2) 설명 등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23.6)에 따라 도입되는('23.12) 신설 업종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 행정 사항

- (항만 관리청) 소관 항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회의 참석 안내
- (사업자 등) 회의 참석 희망자 등께서는 참석 여부 등을 아래에 따라 각 관리청 담당자에게 붙임 3 서식(33p)으로 이메일로 제출

권역	제출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원권	동해지방해수청 항만물류과	김명재 주	033-520-6164	mjkim033@korea.kr
부산권	부산지방해수청 항만물류과	이미영 주	051-609-6445	potatok@korea.kr
경남·전남	여수지방해수청 항만물류과	정세희 주	061-650-6041	unusae@korea.kr
충남·전북	군산지방해수청 항만물류과	신재민 주	063-441-2257	jmsjm1123@korea.kr
인천권	인천지방해수청 항만물류과	김성주 주	032-880-6483	sjspeed@korea.kr

※ 권역별 항만 구분 : 동 페이지 상단 표 참조

※ (기타) 자료 내용 관련 문의 : 해수부 항만운영과 김운석 주무관(044-200-5774, kimunseok@korea.kr)

1. 개요

※ 문의사항 : 해수부 항만운영과 김운석 주무관(044-200-5774, kimunseok@korea.kr)

□ 개정 배경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이 대부분 장기('99~) 미개정되어 현재의 항만운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신규 및 기존 사업자의 효율적 사업 진입 및 운영을 저해하고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악화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항만하역업), 2(검수·검량·감정사업), 6(항만운송관련사업)

-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 규제혁신과제”에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과제가 선정되어 우리부에 개선 요청('23.5, 국조실)

□ 그간 경과 및 향후 일정

- 업계 현황조사 및 서비스 수요자(선·화주 등) 설문조사*('23.5~7, 해수부)
 - * 국내외 해운선사(내항, 외항), 해운대리점, 화주, 정유사 등 대상 실시 → 일부 항만에서 서비스 공급, 품질, 가격 등 관련 개선 의견이 일부 접수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개선건의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
- 상단 조사 결과, 항만 운영여건(물동량, 선박 입출항 등) 변화 등을 고려하여 등록(신고)기준 개정(안) 마련('23.8, 해수부·한국해운물류학회)
- 권역별 업계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23.9.5~9.13, 해수부)
- 기존 업종 등록기준 재정립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마련 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10, 해수부)
 -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23.6.20 개정, '23.12.21 시행)으로 신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3.12, 해수부)

□ 개정 방향

- 물동량,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선박 가액·크기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항만 급지, 장비·선박 보유기준 등 현행화
- 현 정부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신규업체 진입 장벽 해소 및 기존업체의 유연한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인력·장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최소인력, 사무실, 자본금 등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 기준 철폐('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3.7)

** 해당 업종에 대해 해당 항만에서 통용되는 최소규모 선박 보유 시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신규 업체 진입 촉진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영업에 활용하지 않음에도 과도한 등록 기준에 따라 기존 업체가 보유한 불필요한 인력·장비 철수에 따른 서비스 공급 과잉 정상화 등

○ (참고) 금번 개정 시 고려사항

-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규제 완화('97, 면허·허가→) 후 현재까지 등록·신고제로 운영 중인 “자유업종”이며, 무역항의 원활한 물류(하역·입출항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업종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상시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다소 부족한 높은 등록기준을 설정(유지)하여 서비스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항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자 진입 및 경쟁을 제약하여 서비스의 품질, 다양성 및 충분성 확보를 어렵게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 권리를 방해
- 이에 금번 등록기준 개정(안)은 각 항만에서 최소한의 영업을 가능한 수준의 자본 및 장비를 가진 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사업자도 각 영업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를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아울러 항만운송(관련)사업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영업망,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등 비유형 영업자산이 서비스 수요자의 업체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기준 일부 완화가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점도 고려
- 한편 급지 및 일부 등록기준 상향(현실화)에 따라 변경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사업자(양도, 합병 등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존속기간 동안 개정 前 기존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개정안 부칙에 마련할 예정임

□ 주요 개정사항

- **(하역업)** 항만 급지 **현행화**, 시설·장비 기준 조정* 등

* 항만별 통상적인 작업 형태, 주요 장비(지게차, 쇼어크레인 등) 시장가격 변동 등 반영

- **(검수사업)** 급지 **세분화**(‘컨’, 非‘컨’) 및 조정, 인력 기준 **완화***

* 최근 환경변화 반영(디지털화·자동화, 보조검수사 활용 등에 따른 검수사 현장 상주 소요 감소 등)

- **(검량·감정사업)** 인력 기준 **완화*** 및 검량·감정사 자격 동시 보유 인력 확보 시 인력 기준 **추가 완화**(인력기준 일부 중복 충족 인정)

* 자동 계측 인프라 확산, 해양 분야 직종 전문화 심화 등 업계 영업 여건 변동 감안

- **(항만용역업)** 항만 급지 **현행화** 및 선박(통선, 급수선) 보유기준 **조정***

* (조정 원칙) 급지별 통상적인 최소 규모의 해당 업종 선박 1척(총톤수 합계 기준) 이상 확보 시 등록 허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1급지	2급지	3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	
통선	20톤 ↑	10톤 ↑	5톤 ↑	10톤 ↑	5톤 ↑	5톤 ↑	
급수선	50톤 ↑	10톤 ↑	5톤 ↑	20톤 ↑	10톤 ↑	10톤 ↑	

※ 선박 보유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별로 확보한 전체 선박 총톤수(GT)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기존과 동일)

- **(선박연료공급업)** 항만 급지 **현행화** 및 선박 보유기준 **일부 상향***

* (상향 사유) 급지별 통상적인 최소 규모 선박(현황조사 기반 도출) 1척(총톤수 합계 기준) 이상 확보 시 등록 허용

** 차량(탱크로리) : 차량으로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업체에 대해 사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23.下) 예정으로, 해당 법률 개정 후 급지 통합 등 기준 재검토 예정(금회 현행 유지)

- **(선박수리업)** 항만 급지 및 시설 기준 **통합**(→총면적 20㎡ 이상)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0항에 따라 선박수리업은 영업구역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반영

- **(‘컨’수리업)** 항만 급지 **통합**(3→2급지) 및 조정(물동량 고려), 작업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작업장 면적 기준 **일부 상향**(1급지, 30→35㎡)

* 아울러 작업장 기준 확보 여부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함

- **(선용품공급업)** 장비(자동차) 보유기준 **삭제***

* 업체 영업 형태에 따라 배송 위탁 등 방법으로 선용품 공급이 가능한 점 고려

2. 세부 내용

가. 항만하역업

□ 현행 등록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8.>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사업종류 항만별 내용	일반하역사업			한정하역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시설	시설평가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시설 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관리청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비 고

- 관리청은 물동량(物動量) 감소,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등록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0. 0.>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사업종류	일반하역사업			한정하역사업
	항만별 내용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2급지 (<u>대산항, 포항항,</u> <u>마산항,</u> 동해·묵호항, <u>목포항, 군산항</u>)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1. 시설	시설평가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u>급지별 시설평가액 최소 기준 금액</u> 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u>15억원 이상</u>	<u>4억원 이상</u>	<u>2억원 이상</u>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관리청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비 고

- 관리청은 물동량(物動量) 감소,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검토 근거

- (급지) 그간의 항만물동량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항만별 물동량 등 현황 >

항목	물동량 (`22년, 천톤)	물동량 CAGR (`13~`22, %)	물동량 비중 (`22년, %)	동시접안척수 (`20)	하역업체 수 (일반하역)
합계	1,551,708				
부산항	425,084	3	27.4	159	55(42)
광양항	269,398	1.3	17.4	102	32(24)
울산항	194,857	0.2	12.6	117	52(16)
인천항	149,858	0.3	9.7	125	48(29)
평택·당진항	116,172	0.7	7.5	64	23(18)
대산항	89,566	2.9	5.8	32	9(3)
포항항	50,863	-2.1	3.3	51	18(14)
마산항	31,583	8.6	2.0	29	27(16)
동해·묵호항	30,676	-0.4	2.0	23	20(14)
목포항	25,347	2.6	1.6	28	23(22)
군산항	21,715	1.7	1.4	35	10(8)
여수항	2,958	12.4	0.2	2	1(1)
경인항	724	3.6	0.0	19	3(3)
장항항	695	1.8	0.0	3	4(3)
기타(지방항 등)	142,212	1	9.16		68

<고려 기준>

- **1급지** :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 연간 물동량이 1억톤 이상, 10년간 연평균 물동량 (+)성장, 전국 물동량 점유율 7% 이상 등 고려
- **2급지** :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군산항
 - 연간 물동량 1천만톤 이상, 전국 물동량 점유율 1% 이상 고려
-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외 항만

○ **(시설평가액)** 각 항만별 통상적인 항만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필수 하역장비 가액(업계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 최소치를 반영하여 현실화

- (1급지) 15억원 ≒ 17.7억원 = 크레인(25.9톤, 잡화용) 1대 × 14.1억원
+ 지게차(8톤, 잡화·파레트용) 4대 × 0.9억원

- (2급지) 4억원 ≒ 3.6억원 = 지게차(8톤, 잡화·파레트용) 4대 × 0.9억원

- (3급지) 2억원 ≒ 1.8억원 = 지게차(8톤, 잡화·파레트용) 2대 × 0.9억원

* (참고) **현행 시설평가액 기준**(1~10억원)은 **1992.3.7 개정** 후 현재까지 미변동

○ **(자본금)** 현 기준은 유사 산업군과 비슷하고*, 현재 하역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관련 특별한 이슈 제기가 없는 점 고려하여 **현행 유지**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1.5억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1.5억, 항공기취급업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지상조업사업) 3억원 등

** (참고) **현행 자본금 기준**(0.5~2억원)은 **1999.5.27 개정** 후 현재까지 미변동

○ **(기타)** **현행 시설평가액 산정 세부기준 중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평가액 기준 문구***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점 수정

* (현행) 총시설평가액의 2/3 이상 → (개정) 급지별 시설평가액 최소기준 금액의 2/3 이상

** (사유)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평가액의 최소기준 요구 취지는, 실제 하역작업과 무관한 시설만 확보한 자의 하역사업 등록 방지로서, 현행과 같이 전체 시설평가액 기준으로 2/3 요구 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기타 하역과 관계 없는 시설의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 시설평가액 기준을 미충족하여 하역사업 등록이 불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합리

나. 검수사업

□ **현행 등록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12.14.>

검수사업 ·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구 분	검 수 사 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인천항: 25명 이상 다.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7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3. 감정사				6명 이상	
4. 검량사					6명 이상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등록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0. 0.>

검수사업 ·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가. 검수사업

구 분	1급지 (부산항)	2급지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3급지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군산항)	4급지 (1급지부터 3급지까지를 제외한 항만)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인력(검수사)	24명 이상	1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검토 근거

- (급지) '컨' 물량 다수 항만(1~2급지)과 그 외 항만(3~4급지)에 대해 물동량 크기에 따라 각각 2단계로 나누어 구성(총 4개 급지)

< 항만별 물동량 현황('컨', 전체) >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22년, 천 TEU)
합계	28,822
부산항	22,078
인천항	3,192
광양항	1,864
평택·당진항	853
울산항	389
목포항	92
군산항	71
대산항	67
제주항	63
포항항	58
경인항	32
동해·묵호항	23
기타(지방항 등)	40

전체 화물	
항만	물동량 (22년, 천 톤)
합계	1,551,708
부산항	425,084
광양항	269,398
울산항	194,857
인천항	149,858
평택·당진항	116,172
대산항	89,566
포항항	50,863
마산항	31,583
동해·묵호항	30,676
목포항	25,347
군산항	21,715
여수항	2,958
경인항	724
장항항	695
기타(지방항 등)	142,212

<고려 기준>

- (1급지) 연간 '컨' 물동량 1천만 TEU 이상
 - 부산항
- (2급지) 연간 '컨' 물동량 50만 TEU 이상
 -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 (3급지)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항만 중 전체 화물 물동량 연간 1천만톤 이상
 -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군산항
- (4급지) 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항만

< 항만별 일반화물 검수 실적('18~'22) >

(단위 : 천 톤)

항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합계	44,713	45,857	41,264	44,886	46,769	44,698
울산항	12,072	13,977	12,265	13,480	14,647	13,288
목포항	5,346	6,676	5,859	6,453	6,451	6,157
평택·당진항	4,908	4,629	4,738	5,145	5,831	5,050
부산항	6,163	5,309	4,493	3,832	3,927	4,745
인천항	5,226	4,677	3,862	4,458	4,259	4,496
마산항	3,016	3,260	2,983	4,191	4,307	3,551
포항항	4,435	3,767	3,441	2,675	1,958	3,255
광양항	2,730	2,539	2,663	3,650	4,011	3,118
군산항	764	784	784	816	896	809
대산항	29	127	81	73	334	129
동해·묵호항	24	113	95	114	148	99

※ (참고) 상단은 금번 우리부에서 실시한 업계 현황조사('23.6~7) 시 기존 등록업체 회신자료를 기반으로 함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항만별 검수업체 등록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업체 수 ('23.6월말)	평균 자본금 ('23.6월말)	평균 검수사 수 ('18~'22)	비고
전체	62	141	24	
부산항	6	217	105	
인천항	3	100	38	
광양항	5	100	26	
마산항	9	57	4	
울산항	7	280	9	
동해·묵호항	2	100	3	
군산항	7	90	7	
목포항	6	93	4	
포항항	4	100	8	
평택·당진항	12	144	15	
대산항	1	50	6	
기타	1	50	2	

※ (참고) 상단은 금번 우리부에서 실시한 업계 현황조사('23.6~7) 시 기존 등록업체 회신자료 등을 기반으로 함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인력)** 화물별 검수사 소요인력 차이를 반영하여 급지별로 산출하되, 디지털화·자동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체적 규모는 하향

- (1급지) 24명 = 1척 × 2개 크레인 × 2명 × 3조2교대 × 2척
- (2급지) 12명 = 1척 × 2개 크레인 × 2명 × 3조2교대 × 1척
- (3급지) 2명 = 1척 × 1명 × 2척
- (4급지) 1명 = 1척 × 1명 × 1척

* 자체 플랫폼(터미널 자동화 운영 시스템 포함) 및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 보조검수사 채용 등 검수사 현장 상주 소요 감소 추세

** ('컨') 통상 크레인 1기당 2명(선내 1, 육상 1) 투입 및 선박 1척당 크레인 2기 이상 작업하는 현황 감안 (일반화물) 화물 특성에 따라 검수사는 1명만 현장 인근에서 원격 감독하는(보조검수사 투입) 등 상황별로 검수사 투입 인력 편차가 크고,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1척당 1명으로 산정

*** (참고) **현행** 검수사업 인력기준은 **1999.5.27. 개정** 후 현재까지 **미변동**

- **(자본금)** **현행** 기준이 타 업종* 대비 **높지 않고**, 그간 **현행** 자본금 기준이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은** 점, **금회** 인력 기준이 **완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

* (부동산중개업) 50백만원, (종합여행업) 50백만원, (시설경비업) 100백만원 등

** 상단은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다. 검량 · 감정사업

□ **현행 등록기준**

■ 향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12.14.>

검수사업 ·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구 분	검 수 사 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인천항: 25명 이상 다.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7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3. 감정사				6명 이상	
4. 검량사					6명 이상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등록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0. 0.>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나. 검량사업, 감정사업

구 분	검량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감정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인력 (검량사 또는 감정사)	검량사 4명 이상	감정사 4명 이상	검량사 또는 감정사 6명 이상

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자격 보유자(자격간 중복 계산 허용)를 기준으로 검량사와 감정사를 각각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 검토 근거

○ 선박·항만 내 자동 계측 인프라 확산, 해양 분야 직종 전문화 심화 추세 등으로 검량·감정사업 영업 분야가 축소되는 상황임에도,

- 등록기준(6명 이상) 충족을 위해 실제 인력 소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등록기준만큼 형식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 (참고) 검량·감정사업은 개별 인력의 전문성 및 개성을 요구하는 업종 특성 상 소수 업체로의 통합 및 규모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 검량사업과 감정사업 동시 등록 업체에 검량사와 감정사 자격을 모두 갖춘 인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이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에 모두 대응이 가능함에도 각각 별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비효율 존재

* 업계 현황조사('23.5~6) 시 다수 업체의 개선 요청 사항

○ 이에 각 사업에 대한 인력 기준을 6명에서 4명으로 하향하고,

- 검량·감정사업 동시 수행 시 인력 확보기준을 8명에서 6명으로 추가 하향하여* 각 사업체가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단, 이 경우에도 자격 보유자(자격간 중복 카운팅 허용)를 기준으로 검량사와 감정사를 각각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검량사업 또는 감정사업만을 수행하는 업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 예시 : 검량사·감정사 동시 자격자 2명 + 검량사 자격자 2명 + 감정사 자격자 2명

⇒ 순수 인원 기준 총 6명이나, 자격 보유자 기준 총 8명(검량사 자격 4명, 감정사 자격 4명)으로 검량사업과 감정사업 동시 수행 시 등록기준(인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등록 허용

*** (참고) **현행** 검량·감정사업 인력기준은 **1999.5.27. 개정** 후 현재까지 **미변동**

라. 항만용역업

□ 현행 등록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 15.>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항만용역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통선: 20톤 이상	통선: 10톤 이상	통선: 5톤 이상
2) 제2조제1호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급수선: 5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알루미늄선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통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통선은 여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손해보험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의 경우에는 선박의 수와 관계없이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선 또는 급수선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생략)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여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다. (생략)
 -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등록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0. 0.>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항만용역업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u>평택·당진항</u> , <u>여수항</u>)	2급지 (<u>대산항</u> , <u>포항항</u> , 마산항, 군산항, <u>동해·묵호항</u>)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u>통선: 10톤 이상</u>	<u>통선: 5톤 이상</u>	통선: 5톤 이상
2) 제2조제1호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u>급수선: 20톤 이상</u>	급수선: 10톤 이상	<u>급수선: 10톤 이상</u>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알루미늄선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통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통선은 여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손해보험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의 경우에는 선박의 수와 관계없이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선 또는 급수선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5.~6. (생략)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생략)
-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항만 특성,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항만에서 통선 또는 급수선의 사업 등록이 이루어지 않거나 과소하게 이루어져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 검토 근거

○ (급지) 선박 입출항 척수 및 입항선박 톤수를 감안하여 조정

* (참고) 항만용역업은 화물고정업 외에는 선박(선원)에 대한 역무 제공이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물동량보다는 선박 입출항 정보 및 입항선박 크기를 기준으로 등록기준을 검토함

< 무역항 선박 입항 실적('22) >

(단위 : 척, 톤/ 출처 : PORT-MIS 입출항 신고 통계)

항만	전체 선박(내항+외항)		외항 선박		평균
	입항 척수	평균 톤수	입항 척수	평균 톤수	
합계	193,532	12,793	80,922	27,478	
부산항	58,255	17,363	30,121	32,644	
울산항	24,329	8,826	10,208	19,137	
광양항	23,399	12,647	11,059	23,988	
인천항	14,845	12,195	6,988	22,386	
여수항	10,699	18,339	4,411	43,743	정박지 등 포함
평택·당진항	8,328	16,917	5,005	26,471	
목포항	7,016	6,246	794	31,131	
대산항	6,744	11,477	2,845	23,715	
제주항	5,879	8,313	18	25,011	
포항항	5,590	8,900	2,365	17,664	
마산항	5,584	10,051	1,835	26,070	
군산항	3,732	14,042	1,916	25,571	
동해·묵호항	3,674	6,559	992	11,949	신항 개발계획 등 고려
서귀포항	2,161	439	-	-	
옥포항	2,157	2,092	133	14,797	
고현항	1,645	2,467	194	10,722	
진해항	1,433	2,447	209	8,503	
완도항	1,345	5,673	6	1,541	
옥계항	1,233	3,515	88	10,691	
통영항	1,202	468	782	625	
삼척항	1,194	4,339	-	-	
삼천포항	1,005	7,766	152	46,261	
보령항	538	34,919	204	78,931	
장항항	320	2,256	86	3,075	
호산항	278	40,256	141	76,826	
태안항	265	27,648	120	60,323	
경인항	264	2,191	82	4,223	
하동항	235	25,190	75	76,842	
속초항	184	1,083	100	841	
장승포항	6	125	-	-	

<고려 기준>

- (1급지) 전체 선박 입항 척수 연간 7천척 이상, 외항선 입항 척수 연간 5천척 이상
- (2급지) 전체 선박 입항 척수 연간 3천척 이상, 외항선 입항 척수 연간 1천척 이상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 **(통선)** 업계 현황조사 결과 파악된 급지별 통상적인 최소 규모 통선 크기(5~10GT)를 기준으로 최소 1척 이상 통선 확보 시 등록 허용

- (1급지) 총톤수 10톤 이상 규모로 1척 이상 확보

- (2~3급지) 총톤수 5톤 이상 규모로 1척 이상 확보

* 다만 소규모 본선 대상 운항 등 영업 유연성 지원을 위해 선박의 수와 관계 없이 확보한 선박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 조항은 유지함(급수선과 동일)

** 아울러 항만 특성,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 사업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과소 등록되어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리청이 등록기준을 완화 가능하도록 함(기존 비고 제7호마목에 규정된 관련 조항 문구를 명확히 함, 급수선과 동일)

*** (기타) 선령 기준(최대 30년) 대비 기존 통선의 노후화가 심화(예 : 부산항 평균선령 23년 이상) 중이나 현재 영세 업체는 신규 선박 확보 애로로 등록기준 미달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등록기준 완화(1척 이상 보유 시 등록 허용 원칙)를 통해 불필요한 선박 추가 확보 방지 등 업계의 유연한 경영 활동을 지원

**** (참고) 현행 통선 선박 총톤수 등록기준은 '97.12 이후 미개정

< 무역항 통선 현황(총톤수 기준) >

(단위 : 척, '23.6월말 기준)

구 분	합계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30톤 미만	30톤 이상 40톤 미만	40톤 이상 50톤 미만	50톤 이상
전 체	227	2	40	135	46		2	1
부산청	31	-	3	19	8	-	1	-
인천청	10	-	1	6	3	-	-	-
여수청	49	-	11	34	4	-	-	-
마산청	3	-	-	3	-	-	-	-
울산청	41	-	2	31	8	-	-	-
동해청	11	-	5	6	-	-	-	-
군산청	7	-	1	5	-	1	-	-
목포청	7	-	3	2	1	-	1	-
포항청	1	-	-	-	1	-	-	-
평택청	9	2	3	3	1	-	-	-
대산청	18	-	1	12	5	-	-	-
강원도	3	-	2	-	1	-	-	-
충청남도	7	-	1	4	2	-	-	-
경상남도	21	-	4	7	10	-	-	-
창원시	7	-	2	3	2	-	-	-
전라남도	1	-	1	-	-	-	-	-
제주도	1	-	-	-	-	-	-	1

※ 1급지, 2급지, 3급지

○ (급수선) 업계 현황조사 결과 파악된 급지별 통상적인 최소 규모 급수선 크기(10~20GT)를 기준으로 최소 1척 이상 급수선 확보 시 등록 허용

- (1급지) 총톤수 20톤 이상 규모로 1척 이상 확보

- (2~3급지) 총톤수 10톤 이상 규모로 1척 이상 확보

* 다만 소규모 본선 대상 운항 등 영업 유연성 지원을 위해 선박의 수와 관계 없이 확보한 선박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 조항은 유지함(통선과 동일)

** 아울러 항만 특성,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 사업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과소 등록되어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리청이 등록기준을 완화 가능하도록 함(기존 비고 제7호마목에 규정된 관련 조항 문구를 명확히 함, 통선과 동일)

*** (참고) 현행 급수선 선박 총톤수 등록기준은 '97.12 이후 미개정

< 무역항 급수선 현황(총톤수 기준) >

(단위 : 척, '23.6월말 기준)

구 분	합계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50톤 미만	5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200톤 미만	200톤 이상
전 체	84	-	3	16	30		13	3
부산청	13	-	-	1	8	2	2	-
인천청	6	-	-	-	-	4	2	-
여수청	8	-	-	-	2	4	2	-
마산청	1	-	-	-	1	-	-	-
울산청	6	-	-	-	1	3	2	-
동해청	-	-	-	-	-	-	-	-
군산청	4	-	-	1	3	-	-	-
목포청	3	-	1	-	2	-	-	-
포항청	4	-	-	1	3	-	-	-
평택청	7	-	-	6	-	1	-	-
대산청	3	-	-	-	-	1	2	-
강원도	1	-	-	1	-	-	-	-
충청남도	3	-	1	-	1	1	-	-
경상남도	20	-	1	4	7	3	2	3
창원시	5	-	-	2	2	-	1	-
전라남도	-	-	-	-	-	-	-	-
제주도	-	-	-	-	-	-	-	-

※ 1급지, 2급지, 3급지

- (자본금) 그간 현행 기준이 항만용역업 관련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금회 통선 및 급수선과 관련하여 선박 보유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 유지
- (기타) 급지 및 일부 등록기준 상향에 따라 변경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 시행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적법히 등록되었으나 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로서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

- 영업권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체의 존속기간 동안 개정 前 기존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개정안 부칙에 규정)

* 단 사업 양도, 합병 등 발생 시 양수인,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등의 경우 개정 규정 적용

마. 선박연료공급업

□ 현행 등록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 15.>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선박연료공급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나. 1) 또는 2) 장비			
1) 연료공급선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100톤 이상	총톤수 30톤 이상	총톤수 10톤 이상
2) 연료공급차량 (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탱크 용량 30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20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8킬로리터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4의2. (생략)
-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의 탱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 5의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료공급선의 선체 둘레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 연료공급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填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등과 체결할 것
- 5의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는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 등을 비치할 것
 -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출 것
 -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생략)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연료공급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생략)
-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등록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0. 0.>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선박연료공급업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u>평택·당진항</u> , <u>여수항</u>)	2급지 (<u>대산항</u> , <u>포항항</u> , 마산항, 군산항, <u>동해·묵호항</u>)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만)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나. 1) 또는 2) 장비			
1) 연료공급선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100톤 이상	총톤수 <u>40톤 이상</u>	총톤수 <u>20톤 이상</u>
2) 연료공급차량 (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탱크 용량 30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20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8킬로리터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4의2. (생략)
-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의 탱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 5의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료공급선의 선체 둘레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 연료공급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填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등과 체결할 것
- 5의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는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 등을 비치할 것
 -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추 것
 -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생략)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연료공급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생략)
-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 검토 근거

- **(금지)** 선박 입출항 척수 및 입항선박 톤수를 감안하여 조정

* 금지 조정내역 및 검토 근거는 항만용역업 관련 내용과 동일

- **(선박)** 업계 현황조사 결과 파악된 금지별 통상적인 최소 규모 선박연료공급선 크기(20~40GT)를 감안하여 등록기준 현실화(일부 상향)

* (참고) 현행 선박연료공급선 선박 총톤수 등록기준은 '03.11 이후 미개정

<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선 현황(총톤수 기준) >

(단위 : 척, '23.6월말 기준)

구 분	합계	1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40톤 미만	4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500톤 미만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전 체	325	-	4	19	51	199	40	12
부산청	159	-	2	5	24	102	17	9
인천청	16	-	-	-	-	15	-	1
여수청	28	-	1	3	6	13	5	-
마산청	7	-	-	-	-	6	1	-
울산청	33	-	-	-	8	17	7	1
동해청	6	-	-	-	-	4	2	-
군산청	6	-	-	1	2	3	-	-
목포청	13	-	1	4	2	5	1	-
포항청	5	-	-	-	-	3	2	-
평택청	6	-	-	-	3	2	-	1
대산청	6	-	-	-	1	5	-	-
강원도	8	-	-	-	-	6	2	-
충청남도	8	-	-	-	2	6	-	-
경상남도	13	-	-	3	2	6	2	-
창원시	11	-	-	3	1	6	1	-
전라남도	-	-	-	-	-	-	-	-
제주도	-	-	-	-	-	-	-	-

※ 1금지, 2금지, 3금지

- **(차량)** 차량(탱크로리)으로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업체에 대해 사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23.下) 예정으로, 해당 법률 개정 후 금지 통합 등 기준 재검토 필요한 점 고려하여 금회 미검토(현행 유지)
- **(자본금)** 그간 현행 기준이 선박연료공급업 관련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은 점, 과당 경쟁 및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과도한 신규 업체 진입 가능성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 유지

- (기타) 급지 및 일부 등록기준 상향에 따라 변경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 시행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적법히 등록되었으나 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로서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

- 영업권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체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개정 前 기존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개정안 부칙 마련)

* 사업 양도, 합병 등 발생 시 양수인,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등의 경우 개정 규정 적용

바. 선박수리업

□ 현행 등록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 15.>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선박수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가. 자본금 나. 공구창고 또는 공장	5천만원 이상 총면적 30㎡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5의3. (생략)
-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기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생략)

□ 등록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0. 0.>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선박수리업	공통
가. 자본금 나. 공구창고 또는 공장 등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5의3. (생략)
- 선박수리업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등 기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생략)

□ 검토 근거

- **(금지)** 법률(제26조의3제10항)에 따라 선박수리업은 영업구역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고려하여 불필요한 금지 구분을 삭제함
- **(시설)** 금지 구분 삭제에 따라 시설 기준은 기존 최소기준(3급지)인 총면적 20㎡ 이상으로 통일하며,
 - 시설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확보한 시설이 건축물대장에 창고 또는 공장으로 명시될 필요는 없으나 현재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일선 관리청에 혼선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창고 또는 공장과 유사한 시설 확보 시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관리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 **(자본금)** 그간 현행 기준이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은 점 고려하여 현행 수준 유지

* (기존) "공구창고 또는 공장" → (변경) "공구창고 또는 공장 등"

사. 컨테이너수리업

□ 현행 등록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 15.>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컨테이너수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가. 자본금 나. 공구창고 또는 공장	5천만원 이상 총면적 30m²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m²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m²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5의3. (생략)
-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기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생략)

□ 등록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0. 0.>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컨테이너수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2급지 (1급지를 제외한 항만)
가. 자본금 나. 작업장	5천만원 이상 총면적 35m²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m ² 이상

비 고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5의3. (생략)
-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작업장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재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생략)

□ 검토 근거

- (급지) 항만별 '컨' 물동량, 터미널 운영 현황 등 고려하여 조정
- (시설) '컨'* 수리에 필요한 최소 면적** 고려하여 조정(1급지 상향, 2급지 유지)
 - * (상위 5개 항만, 1급지) 40ft '컨' 비율이 평균 약 50%인 점 고려하여, 40ft '컨' 기준으로 설정.
(그 외, 2급지) 물동량 순 나열 시 40ft '컨' 비율이 높은 항만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군산, 대산 등) 40ft '컨' 취급이 없는 항만도 많은 등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20ft 기준으로 설정
 - ** 20ft '컨' : 13.8㎡ = 폭 2.35m × 길이 5.86m → 작업 공간 고려 시 20ft '컨' 1개에 최소 20㎡ 이상 필요
40ft '컨' : 28.3㎡ = 폭 2.35m × 길이 12.03m → 작업 공간 고려 시 40ft '컨' 1개에 최소 35㎡ 이상 필요
 - *** 다만 현재 40ft '컨'의 일반화 등 고려 시 최소 필요공간 산정 시 40ft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별도 급지 구분 없이 40ft 기준으로 시설기준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 아울러 시설 기준 용어를 '컨'수리 업무에 적합하게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서 “작업장”으로 변경하고, 업종 특성에 맞게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 (자본금) 그간 현행 기준이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은 점 고려하여 현행 수준 유지

< 무역항 '컨' 크기별 물동량(2022) >

항만	전체(TEU) ¹⁾	전체(개) (A)	40ft(개) (B)	20ft 등(개)	B/A
계	28,807,462	18,471,593	10,446,262	18,361,200	56.6
부산항	22,071,862	13,777,091	8,255,289	13,816,573	59.9
인천항	3,190,302	2,052,167	1,115,274	2,075,028	54.3
광양항	1,862,546	1,240,747	620,344	1,242,202	50.0
평택.당진항	851,953	552,192	297,626	554,327	53.9
울산항	389,470	307,083	82,387	307,083	26.8
목포항	92,256	179,255	1,118	91,138	0.6
군산항	71,165	44,020	27,145	44,020	61.7
대산항	67,463	40,476	26,987	40,476	66.7
제주항	63,350	125,638	-	63,350	-
포항항	56,663	50,527	6,136	50,527	12.1
경인항	30,506	21,304	9,202	21,304	43.2
동해.목호항	23,115	22,702	413	22,702	1.8
서귀포항	13,235	25,666	-	13,235	-
완도항	11,926	23,852	-	11,926	-
마산항	10,087	5,746	4,341	5,746	75.5
진해항	1,564	3,127	-	1,564	-

1) 10ft = 0.5 TEU, 20ft = 1 TEU, 40ft = 2 TEU 등 환산하여 합산

아. 선용품공급업

□ 현행 신고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 15.>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선용품공급업	공통
가. 자본금 나. 자동차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비 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7. (생략)

□ 신고기준 변경(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0. 0.>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선용품공급업	공통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비 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 3~7. (생략)

□ 검토 근거

- **(차량)** 우리 부 해석 상 현재 **선용품공급업**은 **선용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공급주체)**가 **사업 신고 대상**이며, 단순히 타인에게서 선용품 배송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 선용품공급업체에 반드시 차량(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할 당위성이 낮고, 각 업체 특성에 따른 자유로운 영업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량 보유기준을 삭제함
- * 아울러 선용품공급업은 당초 신고제로 운영되는 자유 업종이며 해당 영업 수행 사업체 파악이 신고의 주 목적으로, 차량 보유기준 삭제에 따른 업체 증가로 별도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지는 않음
- **(자본금)** 그간 **현행 기준**이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고** 금회 차량 보유기준이 삭제되며, 유사 업종에서 동일한 자본금 기준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 유지**

* (주류면허법) 종합주류도매업, 50백만원 이상

※ 문의사항 : 해수부 항만운영과 김운석 주무관(044-200-5774, kimunseok@korea.kr)

□ 등록기준 신설(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3. 0. 0.>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구분		1급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2급지 (대산항, 포항항, 마산항, 군산항, 동해·묵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필수 기준	가. 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나. 인력	별표 2에 따른 항만별 검수사업, 검량사업, 감정사업 등록기준 중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기타 기준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줄잡이업과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화물고정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중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줄잡이업과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화물고정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검토 근거

- 항만종합서비스업은 검수·검량·감정사업(中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화물고정, 줄잡이 필수) 서비스(이상 “필수 업종”) 및 기타 항만운송관련사업 서비스(이상 “임의 업종”)를 함께 제공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하여,
 - 신설 업종의 등록기준은 항만용역업 급지를 기준으로 상단 “필수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인력)을 통합하여 마련하였으며,
 - 다만, 업체 규모화(One Stop 서비스 제공 등) 유도 및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역량 확보를 위해 자본금 기준은 일부(+5천만원) 상향**

* 전담 안전관리조직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관리자 채용 등

** 항만용역업 자본금 0.5~1억원 + 검수·검량·감정사업 자본금 0.5억 + 추가 0.5억원

붙임 3

참석 여부 및 의견 제출 서식

☐ 참석자 명단

항 만	업 종	소 속	성 명	비 고

※ 항만 : 부산항, 인천항, 동해항, 군산항, 광양항 등

※ 업종 : 항만하역업, 검수사업, 검량사업, 감정사업,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컨'수리업, 선박수리업, 선용품공급업, 기타 등

☐ 사전 의견 제출(필요 시)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

○

-

*